

# 여야, '민생공약협의회' 출범

### 합의 두 달 만에... 민주 "정당정치 활성화 합의 기대" 국힘 "연금 논의 기구 합의해 개혁안 도출해야" 강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반도체·AI·저출생 등 민생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꾸렸다. 앞서 여야 대표가 이룬 내용에 합의한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서 양당은 반도체와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략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업체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통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의 목록을 추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통위(의고통일위원회)

에서 여야 간사들이 논의 중이라고 들었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수석은 "협의회에서 빠르게 뜻을 모은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가 대립해도 멈추지 않는 민생119 앰블런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구당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양당 대표가 부활 의지를 표명하 바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 제정 문제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

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거나 기맹점 등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생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가 상호 투쟁과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 목적인 아닌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호텔 엘리에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시상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올 한 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돼 수상을 받고 있다.

## 한국경제 발전 기여 인정

김 지사,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선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 통해  
혁신성장·경제민주화 동시에 이룩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 한 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에 선정됐다.

'2024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는 한국경제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올해 첫 행사다.

김 지사는 '혁신경제도시' 부문에서 객관적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리더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혁신기업 유치 통한 경제구조 개혁', '중소기업·노사·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기업성장' 등을 통해 혁신성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과로, 올해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은 또 다른 영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에 올해 투자금액 13조 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2024년 9월)까지 민선 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47개 사, 투자 금액 13조4999억 원, 고용인원 1만4,772명(예정 인원 포함)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x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5개 기업에서 9조 1,613억 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이차전지'하면 전북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썬)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xM, LS-L&F 배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 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도 눈에 띈다.

전북만의 기업 '퀵스타트' 지원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전북형 삼성스마트혁신 프로젝트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비자 사업 등이 심사위원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의 대표 정책인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북 전역의 2,8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세계 혜택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해 왔다.

또한, 기업 환경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노사화합을 위해 지난 4월 이뤄낸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신노사정 상생공동선언'도 주목된다.

당시 민선8기 김관영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생산감소, 소득감소, 소비위축,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현대차·타타태우·협력사, 금속노조·금속노련, 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상용차산업 혁신전략을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노동 관련 현안과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전북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과 근로하기 모두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치기로 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HPV 바이러스 인한

### 남성 입인두암 급증

민주 박희승 의원 "백신 접종 지원 필수... 기다릴 시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HPV 감염으로 인한 편도암 등 입인두암의 남성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보진북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2023년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남성 입인두암 환자는 1,222명으로 여성 입인두암 환자 2,016명에 비해 5.7배 많았다.

박희승 의원은 "HPV 바이러스로 인한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남녀 모두에 대한 백신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을 핑계로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HPV로 인한 남성 난임 확률 증가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라도 국가적 수준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리싸이클링 해직자 복직 타결"

전주시·공공운수노조 종합리싸이클링 운영사 등, 합의문 발표  
민주 정동영 의원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구축의 시작" 강조

지난 5월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 타운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이 해직노동자 11명을 오늘 11월 1일자로 일괄채용하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전주리싸이클링 타운 '노·사·정 타협'에 따른 해직자 전원 복직을 함께 이끌어내며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구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전주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성우건설 등 전주종합리싸이클링 타운 4개 운영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주시의회, 국회 환노위, 전주시의회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해직자 복직 타결에 따른 이행 합의문 및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문 서명식'을 열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서명식에 서명하고 우범기 전주시장·남관우 전주시의회의장·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



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창석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장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 따라 전주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4개 운영사는 지난 1월 해직된 노동자 11명을 오는 11월 1일자로 일괄채용한다. 지난 3월 31일 해고된 후 7개월 만에 복직하는 11명의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운영 및 상생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를 이끈 정동영 의원은 "전주 정치권과 전북도당·전주시가 노동자의 복직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로 간에 주장만 하던 문제에 대해 전주시와 사측은 공동합의문의 합의사항인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해직자들의 복직을 위해 모두 애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게 됐다"며 "양보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었다"며 "운영사와 노동조합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원복직된 해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만호 기자

## 수사 이유 출국금지,尹정부 들어 47% 폭증

민주 이상윤 의원 "국민 기본권과 직결...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윤 의원(전주)이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47%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47% 증가했다. 수사재판에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농지이양 은퇴직불

**2024년 신청 접수**

**농지이양**

- 농지 임대료
- 농지 임대료
- 농지 임대료

**직불금**

- 직불금
- 직불금
- 직불금

**가정 시 연봉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가정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만 84세 미만 농업인
- 연령: 만 65세 ~ 79세 미만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농민 전용지 및 경지 정리된 비전용지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자체 신청

☎ 1577-7770